

참고 : 한미 FTA의 고용증대 효과 분석

- '07.1.8(월),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-

□ 한미FTA로 인한 고용효과는 농업분야를 제외할 경우 외자유입 증가,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총량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임

○ KIEP가 '06.3월 실시한 한·미 FTA의 경제적효과 분석에 따르면, 한미FTA로 인해 장기적으로 55만명 일자리 창출 예상

* CGE 자본축적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생산성증대효과(1%) 반영

* 수입증가율 1%p 상승은 총요소생산성 0.19%p 증가함을 제시(산업연구원, 2000)한 바, 한미FTA에 따른 수입증가율 6.2%를 이용하여 예측

< 한미 FTA 경제적효과 분석 (KIEP, '06년) >

구 분	생 산	고 용
증가분	56.7조원	551천명
(증가율)	5.7%	(3.30%)

주: 제조업 및 서비스 각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(1% 포인트) 추가

※ '00-'04년 외국인투자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53만명으로 동 기간 중 창출된 일자리의 20% 차지 (LG경제연구원, '06.2)

○ 다만,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경쟁력 열위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

- 업종별 고용 증가효과는 제조업 13만5천명, 서비스업 46만3천명 등으로 나타남(생산성 증대효과 고려시)

< 한미 FTA 고용증가 효과 분석 (KIEP, '06년) >

구 분	제조업	서비스업	농업	합계
증가분 (증가율)	135천명 (4.6%)	463천명 (4.1%)	△47천명 (△1.9%)	551천명 (3.3%)

- 단기적인 실업발생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호대책을 시행할 예정

- FTA로 인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한 실업급여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고,
- “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”(‘07.4월 시행)을 통하여 특화된 전직·재취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,
- 아울러, ‘산업구조 고도화전략’(‘06.7월)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지원 제도를 강화할 예정임

- 한편, NAFTA 발효 이후 캐나다·멕시코 모두 고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< 캐나다·멕시코의 고용 변화 (1993-2004) >

구 분	NAFTA 전	NAFTA 체결 후							한국	
	1993	1995	1997	1999	2001	2003	2004	증감 ('93-'04)	2004	증감 ('93-'04)
캐나다	1,286만명	1,334만명	1,374만명	1,445만명	1,500만명	1,572만명	1,601만명	315만명 (↑25%)	2,256만명	332만명 (↑17%)
멕시코	3,134만명	3,294만명	3,623만명	3,759만명	3,832만명	3,971만명	4,127만명	993만명 (↑32%)		

* 출처 : OECD (2006)

별첨 : 한·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전략

1.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와 산업구조 고도화 비전

□ 당면 과제

- ① 성장잠재력 저하 : 잠재성장을 4%대의 中速성장시대 진입
- ② 제조업공동화 우려 : 일본의 기술우위와 중국의 원가우위
- ③ 부품소재산업 취약 : 산업間·산업內 연계 고리 약화

□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방향

- 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일류경쟁력 확보
- ② 부품·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화
- ③ 新성장산업·지식서비스업 육성으로 新시장창출·新수출동력화

2. 한·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

□ 한·미간 산업협력 확대

- ① (산업기술협력강화) 공동R&D프로그램, 상호 R&D프로그램 개방 등 산업기술협력 기반 조성, 한·미 산업기술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화 기반조성
- ② (맞춤형 FDI 유치) 한·미 FTA의 외국인투자 효과는 산업별·투자유형별·투자국별로 상이하므로 분야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개발·추진
- ③ (기술평가 및 벤처캐피탈 역량강화) 미국의 발달된 기술평가 및 기술 금융 시스템을 국내에서 활용하여 중소·벤처기업의 활력 도모

□ 산업구조조정지원제도 강화

- ① (FTA 피해 업종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강화)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른 피해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한 지원으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실업 및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
- ② (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사업전환 촉진) 한·미 교역구조가 대체로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일부 경쟁력 상실 업종에 대한 사업전환 지원
 - * 산발법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('06.3월 제정) : 사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경영자원 활용에 정부지원, 자금·컨설팅·정보지원, 재취업 알선 등 자문지원
- ③ (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) 신기술 창업 활성화, R&D 역량강화, 일반 중소기업 구조전환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
 - *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등 창업규제 완화,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기술 혁신역량 강화, 중소기업 사업전환 절차 간소화 및 세제 지원 확대 등

□ 경제시스템의 선진화

- ① (선진형 노사관계 정립)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, 상생·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및 외국인투자 기업의 노무관리 개선 추진
- ② (글로벌 경쟁환경을 고려한 경쟁정책 및 M&A 활성화) 글로벌 시장편입 가속화에 대응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, M&A 촉진 및 정당한 방어권 부여를 통해 기업지배권시장의 건전한 활성화
- ③ (OECD 수준의 회사법체계 구축) 글로벌 경쟁심화,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기업설립 및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회사제도 개편
- ④ (기업친화적 환경정책 추진)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정책과의 조화 추진
- ⑤ (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 :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 확산) CSR이 국제적 규범화 추세 속에서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